

#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외국인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act of Free Economic Zone Policy o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Decision

김 보 현\* · 이 동 근\*\*

Kim, Bo-Hyun · Lee, Dong-Geun

### ■ 목 차 ■

- I. 서 론
- II. 경제자유구역 및 외국인 투자 정책의 이론적 고찰
- III.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정책과 외국인 투자 정책의 현황
- IV. 실증 분석
- V. 정책적 함의
- VI. 결 론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실제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반면 중국, 홍콩 등 경쟁국의 경제자유구역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결정 및 만족도에 있어 '토지 조성, 임대료 감면', '근로자 숙련도', '행정의 전문성 확보', '정주여건의 개선'이 가장 중요함을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주저자)

\*\*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공동저자)

논문 접수일: 2011. 2. 10, 심사기간(1,2차): 2011. 2. 11 ~ 2011. 3. 28, 게재확정일: 2011. 3. 28

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자치단체로 전환하여 독립적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 주제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투자 만족도

The Free Economic Zones(FEZ) in Korea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purpose of vitaliz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dvance related Korean industries, like other nations. Nonetheless, there are not many empirical evidences that those FEZs accommodate more foreign direct investment so far. On the other hand, other FEZs of competing nations such as China and HongKong show meaningful achievements. According to the survey conducted for this study, 'Deduction of rental fee', 'Employee skillfulness', 'Expertise in FEZ administration', and 'Living condition for foreigners' are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satisfaction level of those who have made investments in FEZs. In order to improve those conditions and to provide better business environment for foreign firms, deregulation and improvement of business environment are necessary. Thus, in that sense, mandate of power to the respective provincial &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and in the long-term, each provincial & local governments and FEZ authorities should be turned into special provincial &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which can continue the FEZ projects by its own.

□ Keywords: Free Economic Zone, Foreign Direct Investment, Satisfaction for Investment

## I. 서론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가운데에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sup>1)</sup> 또한 작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가 브랜드를 제고해 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 운용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

1) 우리나라는 2010년에 약 6.2%의 GDP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1년에도 4%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세계화와 개방화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중국이 세계 최대의 공장이자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제조 기술력과 품질력을 갖고 있으며, 인도·브라질 등 신흥 개도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비록 우리나라 경제가 GDP나 무역 규모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sup>2)</sup> 자동차·선박·반도체·정보통신 등의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한 핵심 기술력, 높은 대외 의존도, 낮은 생산성, 요소 투입 중심의 생산 구조<sup>3)</sup>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이러한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과감한 경제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에 나서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는 단기적으로 당시 시급한 외환 확보와 함께 대외 신인도를 높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일반적인 전략과 함께 공간적인 개념을 확대한 정책이 바로 경제자유구역(FEZ·Free Economic Zone)의 지정과 개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도입 목적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 목표 아래 2003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총 6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으며,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와 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도입한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영 및 생활환경 등 경제자유구역의 정주여건도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맞물려 추진될 예정이었던 각종 규제 완화도 여러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지체되고 있다.(동아일보사, 2010:p177) 이러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2) 2010년 기준으로 GDP 규모 세계 15위(1조 달러), 무역 규모 9위(9천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3) Krugman(1994), Bloom & Williamson(1997) 등은 1970~1980년대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초고속 경제성장이 노동시간 연장·투자 확대·생산설비 확충 등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 결과에 힘입은 것이며 기술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 등 효율성 증진에 의한 성과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요소 투입 확대에 의한 성장기여율이 한국의 경우 68.4%에 달한다는 실증연구 결과를 정세은 & 김봉환(2004)이 발표해 이를 뒷받침했다.

는 추가적인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 등 경쟁국의 경제특구 간 경쟁이 치열한데다 개방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시각이 아직도 강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정책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출된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실증 분석을 병행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 연구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념과 유형을 정리해 보고,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및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해 있는 외국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인센티브, 즉 각종 규제 완화와 자유화 등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외국인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 II. 경제자유구역 및 외국인 투자 정책의 이론적 고찰

### 1. 외국인 투자의 개념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와 경영을 통한 자본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를 포함한다. 이중 직접투자는 다시 자산 개념과 기업 개념으로 나뉜다. 자산 개념에 입각한 경우에는 유무형의 자산이 이전되어 부를 창조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말하며, 기업 개념에 기초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속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설정할 목적으로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김신 외, 2010:p24)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표 1> 외국인 투자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세분류	투자 내용	비고	
민간 상업 차관 (Foreign Bank Lending)	장기 차관	5년 이상 대부	OECD는 FDI로 분류	
	중단기 차관	5년 미만 대부		
외국인 증권투자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주식 투자	상장·비상장주식 투자	10% 미만 투자	
	채권투자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국채, 지방채, 특수채 투자		
	주가지수투자	주가지수 선물·옵션 투자		
	단기상품투자	만기 3개월 미만 금융상품 투자 - 기업 발행: CP, CB - 금융기관 발행: CD, RP		
외국인 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신주 취득	신규투자	신주 10% 이상 투자	최협의의 직접투자(창업투자)
		증액투자	증자 10% 이상 투자	
		자산 인수	사업 부문, 영업권, 부동산 등 경영활동 관련 자산 인수	광의의 M&A
	구주 취득 (협의의 M&A)	기발행주식(상장·비상장)의 10% 이상 투자		
	장기 차관	해외 모기업 또는 해외 모기업과의 자본출자회사로부터 도입하는 5년 이상의 차관		

자료: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자료 종합

외국인 투자는 투자 기업의 해외 진출 목적이나 투자 동기에 따라 크게 **생산거점형 투자**와 **시장접근형 투자**로 구분된다.(지식경제부, 2009:p24) **생산거점형 투자**는 국내에서 임금 등 요소가격이 상승해 채산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형태의 해외투자이다. 대부분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접근형 투자**는 제품의 품질·디자인 등 특정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투자 유치국의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진출하는 형태인데, 주로 기계·화학·자동차 등 기술집약형 산업에서 다국적 기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sup>4)</sup>

4)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은 시장접근형 투자를 더 선호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초기에는 저렴한 노동력에 기반을 두고 생산거점형 투자 유치에 특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점차 인건비가 상승하고 산업 구조도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접근형 투자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첨단기술 관련 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2. 외국인 투자의 효과

각국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기술 이전, 고용 창출, 성장동력 확충 등에 있어서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본의 유입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인한 인적자본의 증가, 기술 변화, 기업 간·산업 내 경쟁 강도 강화 등의 파급 효과를 통해 국내 경제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06:pp1~7; 이홍식, 2008:pp11~12; 정세은 & 김봉한, 2008:p124~142; 남광희 & 윤성훈, 2008:pp21~38; 류상영, 2009:p7).

현실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투자자와 이를 받아들이는 국가의 필요 또는 이해가 맞아 떨어질 때 이루어진다. 한 나라에 외국인 투자가 얼마나 유입되는가는 투자국 및 피투자국의 정책 변수, 시장 규모나 생산함수를 결정하는 시장 조건, 정치경제적 안정성 또는 위험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함수로 파악된다. 또한 국민소득 수준이나 매출 규모는 물론 GDP 성장률이나 이자율, 금융시장 수익률 변동과 같은 경기 순환적 요인과 경제의 구조조정, 민영화나 시장 개방의 확대와 같은 교역·투자정책의 변화, 환율정책 기조의 변동, 지역경제 통합 움직임 등과 같은 정책 기조의 변화도 외국인 투자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이병기, 2008:pp30~32) 이러한 외부 요인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이다.

## 3. 경제자유구역의 개념과 의의

경제자유구역이란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조성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특구'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경제활동 부문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해주는 특별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그 목적과 기능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의의는 크게 다섯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 완화의 시험장(Test Bed)으로 기능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우리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들 수 있으며, 네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가속화하는 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경

제 활성화 제고를 들 수 있다.(지식경제부, 2008:pp22~23)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외국인 투자 유치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주었다는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2004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우리나라에 투자된 FDI 총액은 708억 달러 수준이나, 이중 경제자유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3%(23.4억 달러)에 불과하다.(조현숙 & 장현미, 2010:p29)

이 때문에 다른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폴란드 등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산업 구조 선진화를 이룩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실패 사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sup>5)</sup> 기본적으로 정주 여건과 인센티브, 규제 완화, 정부의 지원, 지역사회의 협조 등 여러 요소가 잘 결합될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가 확대된다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 4. 해외 경제자유구역 사례<sup>6)</sup>

외국에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로 조성된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의 사례가 많다. 아일랜드를 비롯한 선진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특구를 만들고 운영해 왔으며,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1960~1970년대부터, 중국은 1980년대부터 경제특구를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과 인도, 동유럽 국가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금융위기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World Bank에 따르면 전세계 경제특구는 2008년 현재 119개국에 걸쳐 2301개에 달하

5) 인도의 경우 2009년 말 기준으로 무려 105개의 경제특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중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곳은 5~6개에 불과하다. 이는 인도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 없이 허가를 남발한데다 재원 부족으로 인해 경제특구의 규모가 외국에 비해 매우 작은 탓이 크다. 또한 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어 개발 사업이 지연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관료주의나 정치 논리로 인해 경제특구 개발이 차질을 빚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집트의 경제특구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콜롬비아는 전혀 경제성이 없는 늪지에 경제특구를 조성해 막대한 자금만 투입되었을 뿐 실질적인 기업 유치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6) 본 사례는 동아일보사(2010)의 2장 '해외 경제자유구역을 가다'를 중심으로 김신·정창화·유종선(2010)의 5장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 규제 체계의 비교·분석', 남광희 & 윤성훈(2005)의 4장 '외국 성공사례', 이병기(2008)의 4장 '아일랜드 FDI 정책의 특징과 제도 변화', 정형곤 & 니승권(2008b)의 3장 '외국인 투자 유치 여건의 비교 평가', 그리고 그 외 각종 학위논문과 언론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며, 이들 경제특구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연간 수출액 8,510억 달러(약 936조원), 일자리 창출 6,844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World Bank, 2009: pp23~27)

가장 먼저 경제특구를 설치한 국가는 아일랜드이다. 아일랜드는 작은 영토와 적은 인구, 부족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집중했고 그 일환으로 1959년 새년(Shannon)에 경제특구를 조성했다. 특히 1990년대부터는 IT산업 육성에 집중해 세계 소프트웨어 10대 기업 중 7개를 유치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고, 그 결과로 1인당 GDP가 4만 달러에 달하는 등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별도로 구역을 특정하지 않고 아예 전국을 '경제특구화'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드물게 영어 구사가 가능한 우수 인력, 의료·교육 등 뛰어난 정주여건, 자유로운 기업 환경, 우수한 행정 서비스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두 지역 모두 중국·동남아시아라는 거대 배후 시장을 지리적 이점으로 활용해 주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유치하고 있다.

중국은 선전, 상하이(푸둥), 텐진(빈하이), 샤먼, 하이난 등 경제특구뿐 아니라 연해대의 개방항구도시(14개), 연해삼각주경제개방구(3개) 등 다양한 특성을 갖춘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저렴한 노동력과 용지 등 생산요소의 경쟁력을 앞세워 제조업 중심으로 육성했으나, 최근에는 금융 등 서비스산업과 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위주로 경제특구를 재편하고 있다. 또한 광저우, 선전, 홍콩, 마카오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 풍부한 자금과 인력, 거대 소비시장 등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UAE, 사우디와 같은 중동 국가들은 과도한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경쟁적으로 경제특구 건설에 나서고 있다. 두바이의 제벨 알리 프리 존(JAFZ) 등 경제특구는 세금과 외환 규제, 노동 쟁의 등이 없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과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바탕으로 중동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2005년부터 킹 압둘라 경제 시티(KAEC)를 비롯해 6개 경제도시의 건설을 시작했다. 모두 무역, 물류, 제조, 금융 등의 복합 기능이 집적된 경제특구로서, 총 투자 규모가 1200억 달러에 달한다.

폴란드는 1989년 사회주의 붕괴 이후 경제 공황에 빠지면서 실업률이 무려 30~40%에 달했다. 이에 폴란드 정부는 1996년부터 법인세 감면, 투자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역 지정 등을 바탕으로 14개의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1200여개 외국 기업을 유치했다. 경제가 활력을 찾으면서 실업률은 10%선으로 떨어졌고, 2009년에는 EU 회원국 중 폴란드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1.7%)을 기록했다. 재정위기와 생산성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유럽에서 폴란드는 거의 유일하게 활기를 보이고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



## 5. 주요 선행 연구

그러나 이러한 실증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특히 학술 논문)는 그 수나 주제의 다양성 면에서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sup>7)</sup> 이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역사가 아직 길지 않고, 제도 자체도 관세자유지역, 수출자유지역 등 그 목적과 기능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온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절에서는 그중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비교적 통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한 선행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sup>8)</sup>

정형곤 & 나승권(2008b)의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과제’ 연구는 해외 선진 경제자유구역과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 여건 비교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추진 방안과 개선 과제를 도출한 정책 종합 보고서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시장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에서 해외 경제자유구역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며, 특히 조세와 경영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성봉(2006)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운영 방안’ 연구에서는 다른 아시아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영어 구사 능력, 국제화·개방의식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주여건이나 행정 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기존 연구와는 달리 정성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을 주로 논의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수행(2009)의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역 발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Control Tower의 구축,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쟁력 또는 외자 유치에 주목하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지역적인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로 평가된다.

대한상공회의소(2007)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외자 유치 부진 실태를 지적하고 규제 개혁, 인센티브 강화, 국내 기업 차별 해소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2009)는 또한 ‘주한 외국 기업이 바라본 국내외 투자 환경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을 경쟁국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인허가 행정규

7) 그나마 일부 있는 선행 연구의 경우에도 김신, 정창화, 유종선(201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의 측면 또는 보건·교육·의료 등 규제 완화 또는 제도 개선과 같은 기능적인 관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주로 다루고 있다. 연구 주체도 정부 또는 관련 연구소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학술 논문보다는 정책보고서의 형태나 특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8) 경제자유구역 별로 개별적인 개발 현황을 다루고 있거나 정부 부처·산하 기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회 예산정책처, KOTRA 등)이 출판한 연구는 제외한다.

제 완화, 노사관계 안정, 조세 감면 확대, 정책 일관성 유지를 주문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도입 초기부터 관심을 가져 왔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한 외국 기업인 인식 조사’(2004)에서는 우리나라의 투자 여건을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생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sup>9)</sup>,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제도의 보완과제’(2009)에서는 외국인 기업의 투자 저해 요인을 행정, 인센티브, 기반시설, 정주여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은행 산하 외국인 투자 자문기관 FIAS(Foreign Investment Advisory Service)의 ‘Special Economic Zones: Performances, Lessons learned, and Implications for Zone Development(2009)는 바람직한 경제특구 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보고서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경제특구의 성공 여부는 규제 개혁·인센티브 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개발에 있어 시장 환경과 기업 수요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입증하고 있다.

OECD(2009)는 ‘Stocktaking of Good Practices for Free Economic Zone Development’에서 각국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그 공통 요인으로 민간 주도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부는 거시적인 틀에서 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하고, 실제 개발은 기업 등 민간 부문이 담당할 때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Ⅲ.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정책과 외국인 투자 정책의 현황

#### 1.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정책의 변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정책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그 전후를 구분할 수 있으며,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크게 3단계에 걸쳐서 변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경제 발전 초기에는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어느 정도 산업화가 달성된 1980년대 중반부터는 투자 자유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외국의 시장 개방 압력과 대

9) 생활환경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 조사가 처음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지식경제부와 KOTRA의 연간 외국인 기업 대상 조사에서 생활환경 애로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대적인 필요성에 의해 자유화를 가속해 왔다.

산업화 초기였던 제 1단계(1962~1983년)는 투자 제한 단계라 볼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외화 획득을 위해 수출산업을 적극 육성하였지만 외자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했는데(류상영, 2009:p1), 이는 외국 기업이 자본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보다 차관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국인의 국내 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도 50%를 넘을 수 없었고, 경영 참여도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세는 1980년대 초반 정부 주도의 산업화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개발도상국의 외채 위기로 차관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 방향은 규제에서 유치로 전환하는 제 2단계(1984~1989년)에 접어들게 된다. 정부는 1984년 7월 그 동안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업종을 명시해온 ‘허용 업종 열거 방식’(Positive System)을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명시하는 ‘금지·제한 업종 열거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제한 업종에 대하여는 그 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50% 보유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전환의 폭은 외국 기업의 기대치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으며, 실제 외국인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제 3단계(1990~1997년)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유화 단계이다. 1991년에는 인가제와 병행하여 신고제를 도입하였고, 1992년에는 ‘신고제 원칙-인가제 예외’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1993년에는 224개 제한 업종 중 132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 개방 5개년 계획’(1993~1997년)을 수립하였다. 1994년에는 신고 수리 기관을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일반 외국환은행으로 확대하였으며, 신고 수리 기간도 20일 내지 30일에서 3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1995년에는 복합 민원 일괄합동심의제와 민원자동승인제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적극적인 자유화 조치를 취해오던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자유화를 한층 가속화하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 제도를 선진화시키려는 차원에서 1997년 1월 기존의 『외자도입법』<sup>10)</sup>을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OECD에 제출한 개방 계획에 맞추어 1997년 1월 81개 제한 업종 중 2000년까지 47개 업종의 단계적인 자

10) 1966년 8월 제정·공포된 후 1983년 전문 개정되면서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외자관리법’을 폐지하고 이들 두 법률의 내용을 흡수하였다. 동 법률은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승인 기준을 마련하였고, 외국인 투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출자, 기업의 등록, 배당금 등의 송금, 출자금의 회수, 외자 등의 처분 제한과 조세의 감면, 기타 특전을 보장하였다. 그 밖에 차관계약·기술도입계약 및 공공차관계약,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1997년 1월 13일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유화계획을 수립하였다. 1990년대에 추진한 자유화 조치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는 1992~1993년을 저점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신고 기준으로 1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던 외국인 투자액은 1995년 들어 2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1996년에는 30억 달러, 1997년에는 6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상승세는 1997년 말에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맞게 되면서 시급한 외환 확보와 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 정책 전환과 저가 매물의 출현으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되었다.<sup>11)</sup>

제 4단계(1998년 이후)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이는 투자 유치 촉진 단계로서, 특히 외환위기 이후의 외국인 투자 정책은 그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다방면에 걸쳐 추진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성과로는 획기적인 개방과 자유화 폭의 확대, 『외국인투자촉진법』<sup>12)</sup>의 제정 등을 꼽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2003년)와 이명박 정부(2008년)에 들어와서는 단순 외자 유치에서 벗어나 산업 구조를 선진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로 초점을 이동해 가고 있다.

〈표 2〉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정책의 단계적 변화

단계	주요 내용
투자 제한 단계 (1962~1983)	- 외국인 투자보다 차관 우선의 외자 유치 정책 - 국내 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지배 우려
기반 조성 단계 (1984~1989)	- 허용 업종 열거 방식(positive)에서 금지/제한 업종 열거 방식으로 전환 - 제한 업종에 대한 일률적 50% 보유 제한 폐지
자유화 단계 (1990~1997)	- 외국인 투자 신고제 도입, 원칙 신고-예외인가제로 전환 - 외국인 투자 개방 5개년 계획 수립 - 공장 설립과 관련 복합 민원 일괄합동심의회 및 민원자동승인제 도입 - 우호적 M&A 투자 허용

11)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외국 기업·자본(사모펀드 등)이 한국 기업을 사들인 데 힘입은 바 크다. 외환은행은 Lone Star에 매각되었으며(최근 하나은행에 재매각을 앞두고 있다.), 제일은행은 New Bridge Capital에 매각되었다가 Standard Chartered에 재매각되었다. 대우자동차는 GM에 매각되었으며, 삼성자동차도 Renault에 매각되었다. 해태제과, 하이닉스 비메모리 부문, 하이마트 등도 외국 기업·자본에 인수됐다.

그러나 류상영(2009)이 지적처럼 이러한 급격한 외국인 투자의 증가는 국내에서 외국 자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는 부작용 또한 초래했다. 특히 일부 투기자본의 경우 인력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차익만을 남기고 단기간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국부·첨단기술 유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12) 1998년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외국인 투자의 보호와 자유화 및 절차,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사후관리, 기술도입계약 등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단계	주요 내용
유치 촉진 단계 (1998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추가 개방</li> <li>- 외국인의 국내 기업 M&amp;A 전면 허용</li> <li>- 외국환 거래 자유화</li> <li>- 외국인의 토지 취득 전면 개방</li> <li>-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1998년 7월)</li> <li>- 규제 개혁 및 4대 부문 개혁 추진</li> </ul>

자료: '글로벌 경제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 산업연구원(2001), p88

## 2. 경제자유구역의 도입과 현황

이러한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이다. 정부는 2002년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육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발표하고 2002년 12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sup>13)</sup>을 제정하게 된다. 이어 정부는 2003년 7월 경제자유구역 위원회<sup>14)</sup>를 발족하고 경제자유구역기획단<sup>15)</sup>을 창설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인천 경제자유구역(2003년 8월 6일),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2003년 10월 27일)이 1차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2008년 5월 6일 2차로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다. 이중 1단계 3개 구역은 총 투자비 368조 원, 생산유발 1,155조 원, 부가가치유발 40조 원, 고용유발 232만 8천 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

13)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4조),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 기업의 보호, 대기업의 참여 제한, 근로기준법상 휴가, 파견 대상 업종·파견 기간에 대한 예외 인정(17조), 외국어 서비스 제공(20조), 자유경제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22조),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약국의 개설과 그 종사자 관련 규정(23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시장·도지사 소속의 전담 행정기구(27조)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실시계획의 승인, 인·허가 등, 개발 사업의 착수, 토지 수용, 준공 검사, 조세·부담금의 감면, 세제 및 자금 지원, 산업평화 유지,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외국 방송의 재송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특례, 권한의 위임,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에 설치된 기구이다. 지식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기본 정책과 제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 및 변경, 외국인 투자 기업이 사업하는 데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등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제반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15)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설립된 기관이다.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운영보좌,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왔으며, 현재 경제자유구역에는 총 545.3억 달러 사업 규모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 중 개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8%에 달한다.

〈표 3〉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

명칭	위치	완료 시기	면적	중점 유치 업종
인천	인천	2020년	209km <sup>2</sup>	비즈니스, IT·BT, 국제금융, 관광·레저
부산·진해	부산, 경남		104km <sup>2</sup>	해운·물류, 자동차, 기계, 조선
광양만권	전남, 경남		90km <sup>2</sup>	해운·물류, 소재산업
황해	경기, 충남	2025년	55km <sup>2</sup>	자동차부품, IT·BT, 부가가치 물류
대구·경북	대구, 경북	2020년	39km <sup>2</sup>	교육, 의료, 패션, IT, 부품·소재
새만금·군산	전북	2030년	66km <sup>2</sup>	자동차, 조선, 부품·소재, 환경친화형 산업

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www.feز.go.kr)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은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직 초기 개발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의 외자 유치 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sup>16)</sup>(대한상공회의소, 2007:p6), 그 원인으로 각종 규제에 따른 개발 속도의 저하, 여전히 미흡한 투자 환경 수준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이수행, 2009:pp11~12)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을 폐지하거나(이상동, 2010:pp12~16) 최소한 구조조정하는 것(정형곤 & 나승권, 2011:pp6~7)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12월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업성이 결여된 곳이나 중복 지정된 지역 그리고 법적으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등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12곳에 대해 지구 지정 해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된 지역의 면적은 총 90.51km<sup>2</sup>로 전체 6개 경제자유구역(93개 단위지구) 총면적 571km<sup>2</sup>의 15.9%에 이른다. 이러한 결정은 이미 2010년 9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에 근거한 것이다.<sup>17)</sup>

16) 대한상공회의소(2007)에 따르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도 실제 투자는 포기하는 외국인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복합레저타운 조성, 차이나시티 건설, 송도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 조성 등 약 7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취소된 바 있다.

17) 정부는 2010년 9월 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에서 개발 부적합 지구 정비, 성과 평가를 통한 경쟁 체제 운용 등을 통해 성과가 저조하거나 미흡한 지구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는 지구 지정 해제나 성과 평가 강화 등의 미시적인 접근만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토 전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보다 큰 틀에서 정부가 거시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충북과 강원 등 타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미 기존 6개 경제자유구역 간, 그리고 신규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유치산업 중복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양금승, 2010)

## IV. 실증 분석

### 1. 연구 가설의 설정 및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전 연구를 보면, 동아일보(2010)의 경우 각국의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평가요소로 입지경쟁력, 요소경쟁력, 정책운영 경쟁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예가 있었다. 또한 박봉규(2003)에서는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 유치 기관 지원, 지자체 지원, 입지비용 절감 정책, 조세 감면 정책, 생활여건이 외국인 투자 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미치는 요인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투자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인센티브요인이다. 인센티브요인은 크게 조세감면제도, 재정지원제도, 규제완화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볼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요소에 대한 경영·생활환경요인이다. 경영·생활환경요인도 크게 외국 기업의 경영환경요인과 외국인의 생활환경요인으로 나누어서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 요인은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는 운영시스템요인이다. 운영시스템 요인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성, 경제자유구역의 지속성,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기관의 전문성 등을 평가해 볼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외국인 투자 결정변수인 투자 만족도, 향후 재투자 의사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를 알아보고 특히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과 미흡한 요인을 알아보는 모형을 구

축하고자 한다. 또한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환경이 투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볼 것이다.

설문조사와 연구모형을 통해 검증해 보아야 할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경제자유구역정책이 외국인 투자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다.**

가설 1-1. 인센티브 요인이 외국인 투자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다.

가설 1-2. 경영·생활환경 요인이 외국인 투자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다.

가설 1-3. 운영시스템 요인이 외국인 투자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다.

**가설 2. 경제자유구역정책이 향후 재투자 의사를 높여줄 것이다.**

가설 2-1. 인센티브 요인이 향후 재투자 의사를 높여줄 것이다.

가설 2-2. 경영·생활환경 요인이 향후 재투자 의사를 높여줄 것이다.

가설 2-3. 운영시스템 요인이 향후 재투자 의사를 높여줄 것이다.

**가설 3.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환경이 외국인 투자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다.**

가설 3-1. 개방적인 투자환경이 외국인 투자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다.

가설 3-2. 효율적인 투자제도가 외국인 투자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다.

가설 3-3. 적극적인 투자정책이 외국인 투자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다.

가설 3-4.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 의식이 외국인 투자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다.

제시된 가설에 따라 외국인 투자 만족도와 재투자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모델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SATI = \beta_0 + \beta_1 I_{tax} + \beta_2 I_{cas} + \beta_3 I_{der} + \beta_4 E_{man} + \beta_5 E_{liv} + \beta_6 S_{eff} + \beta_7 S_{dur} + \beta_8 S_{pro} + \epsilon$$

$$REIN = \beta_0 + \beta_1 I_{tax} + \beta_2 I_{cas} + \beta_3 I_{der} + \beta_4 E_{man} + \beta_5 E_{liv} + \beta_6 S_{eff} + \beta_7 S_{dur} + \beta_8 S_{pro} + \epsilon$$

여기서 SATI는 외국인 투자 만족도, REIN은 향후 재투자 의사를 나타내며  $I_{tax}$ 는 조세 감면 인센티브 요인,  $I_{cas}$ 는 재정 지원 인센티브 요인,  $I_{der}$ 는 규제 완화 인센티브 요인,  $E_{man}$ 는 경영환경 요인,  $E_{liv}$ 는 생활환경 요인,  $S_{eff}$ 는 운영시스템 효율성 요인,  $S_{dur}$ 는 운영시스템 지속성 요인,  $S_{pro}$ 는 운영시스템 전문성 요인을 나타낸다.

또한 세 번째 가설에서 외국인 투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환경 요소를 알아보기 위한 모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ATI = \beta_0 + \beta_1 O + \beta_2 Ef + \beta_3 A + \beta_4 C + \epsilon$$

여기서 SATI는 외국인 투자 만족도, O는 개방적인 투자 환경, Ef는 효율적인 투자제도, A는 적극적인 투자정책, C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 의식을 나타낸다.

이 가설을 검증해 보기 위해 2009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 있는 215개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총 83개를 회수하였다. 설문 참여 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설문 참여 기업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비율(%)
기업 소재지	인천	24	28.92
	부산·진해	28	33.73
	광양만	28	33.73
	황해	1	1.20
	대구·경북	1	1.20
	새만금·군산	1	1.20
	Total	83	100.00
본사 소재지	미국	17	20.48
	일본	18	21.69
	중국	11	13.25
	EU	19	22.89
	기타	18	21.69
	Total	83	100.00
업종별	제조업	35	42.17
	서비스업	37	44.58
	기타	11	13.25
	Total	83	100.00
종업원 수	50인 미만	51	61.45
	50인 이상~300인 미만	24	25.30
	300인 이상	8	9.64
	Total	83	100.00

본 설문조사는 크게 매력도와 만족도, 투자 환경 평가의 3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매력도 문항에서는 투자 이유, 다른 국가와의 비교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질문했고, 만족도 문항에서는 전반적인 만족도와 영역별/부문별 만족도를 중심으로 투자 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실제 기업 경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투자 환경 평가 문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전반적인 투자 환경에 대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질문했다.

## 2. 주요 설문 내용

먼저 매력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한국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한국에 경제자유구역 이외에도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중국·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의 경제자유구역(또는 경제특구)에 비해 우수하다고 보느냐’,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다른 국가의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하여 매력력이 있다고 보느냐’, ‘한국에 경제자유구역이 없었다면 어느 곳에 투자했을 것인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 등 총 6개 문항을 질문했다.

만족도 영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혜택을 인센티브 요인, 경영·생활환경 요인, 운영 시스템 요인 등 3개의 그룹으로 묶어 각각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정책, 환경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수익성 또는 경영 성과가 당초 기대 수준에 비해 만족스러운 수준인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추가적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다른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의향이 있느냐’, ‘경제자유구역이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느냐’, ‘한국에 경제자유구역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보느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등 총 7개 문항을 질문했다.

투자 환경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환경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묻는 4개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5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이어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초의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느냐’, ‘투자 대상국의 국민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실제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등 총 4개 문항을 질문했다.

### 3. 타당성 검증

설문 항목들이 연구의 목적과 의도에 동일하게 특정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또한 각 요인들의 신뢰성 크기에 대하여 크롬바하 알파값을 사용하였다.

결과와 같이 고유값 1 이상이고 varimax 방법으로 8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지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적재량이 0.5 이하인 '8-3-4번 경제자유구역의 자율성'이 빠진 29개의 변수가 사용되었다. 추출된 8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74.58%를 설명하고 있으며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은 대부분 0.5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지니고 있어 설문 문항이 개념적으로 타당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변수들의 신뢰성 크기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변수를 설명하는 항목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먼저 인센티브 요인을 묻는 9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 조세 감면 요인(5문항)과 현금 지원 요인+규제 완화 요인(4문항)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즉 현금 지원과 규제 완화 요인이 같이 묶여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인센티브 요인 중에서 조세 감면요인이 별도로 나누어진 것에 비하여, 현금 지원과 규제 완화 요인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경영-생활환경 요인의 11문항의 경우 경영환경요인(5문항), 생활환경요인(3문항), 사회 인프라요인(3문항) 세 가지로 분석되었다. 특이할만한 점은 생활환경으로 같이 묶었던 생활환경요인이 분리되어서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인프라요인을 추가하여 향후 분석에 이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영시스템 요인을 묻는 10문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자율성' 문항(8-3-4)은 요인부하량이 0.5 이하를 나타내 제거되었고 나머지 9문항은 효율성요인(3문항), 지속성요인(4문항), 전문성요인(2문항)으로 나누어졌다. 전문성요인 중 서비스 마인드 문항이 지속성요인으로 포함되었으나, 서비스 마인드를 지속성 요인으로 포함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분석에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조세요인, 현금지원/규제완화요인, 경영환경요인, 생활환경요인, 사회인프라요인, 운영효율성요인, 운영지속성요인, 운영전문성요인으로 8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졌다. 앞서 가설에서 제시된 요인 개수와 동일하나 인센티브 부문에서 현금지원요인과 규제완화요인이 합쳐졌으며, 경영·생활환경 부문에서는 사회인프라요인이 추가되어 세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나 앞으로의 분석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같은 요인분석 결과를 그대로 향후 분석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표 5> 설문 문항 요인분석 결과 1

요인	문항	적재량	고유값
조세요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감면	0.940	4.560
	관세 3년간 면제/감면	0.940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감면	0.939	
	재산세 면제/감면	0.882	
	외국인 근로자 비과세/감면	0.696	
경영환경요인	근로자 숙련도	0.858	2.885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기업 수	0.693	
	인접 시장 규모	0.693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수준	0.686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용지 가격	0.523	
현금지원/ 규제완화요인	R&D 및 시설 투자금액 일부 현금 지원	0.807	2.872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제도	0.802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 등 수도권 규제 완화	0.793	
	임대부지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0.656	
운영효율성요인	투자입주 신청 후 승인까지의 처리 기한	0.869	2.582
	36개 법률상 인허가 일괄처리	0.869	
	정보 획득까지의 소요 절차	0.822	
사회인프라요인	교통·통신 등 기반 인프라 수준	0.809	2.566
	사회 안정성(치안, 노사관계 등)	0.724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전용병원 개수	0.619	
운영지속성요인	국가기관의 경제자유구역 지원 의지	0.737	2.167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	0.670	
	서비스마인드	0.597	
	경제자유구역의 정책 유연성	0.543	
운영전문성요인	직원들의 영어 및 외국어 구사 능력	0.836	2.092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성 확보 정도	0.824	
생활환경요인	거주인구의 영어 능숙도	0.791	1.903
	월세, 집값 수준	0.702	
	생필품 물가 수준	0.662	

〈표 6〉 설문 문항 요인분석 결과 2

요인	분산설명	신뢰도
조세요인	15.72	0.957
경영환경요인	9.95	0.781
현금 지원/규제 완화요인	9.90	0.817
운영효율성요인	8.91	0.866
사회인프라요인	8.85	0.747
운영지속성요인	7.47	0.762
운영전문성요인	7.22	0.720
생활환경요인	6.56	0.707

#### 4. 주요 분석 결과

투자 만족도와 향후 재투자 의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분석모형을 통해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SATI = \beta_0 + \beta_1 I_{tax} + \beta_2 I_{cas} + \beta_3 E_{man} + \beta_4 E_{liv} + \beta_5 E_{inf} + \beta_6 S_{eff} + \beta_7 S_{dur} + \beta_8 S_{pro} + \epsilon$$

$$REIN = \beta_0 + \beta_1 I_{tax} + \beta_2 I_{cas} + \beta_3 E_{man} + \beta_4 E_{liv} + \beta_5 E_{inf} + \beta_6 S_{eff} + \beta_7 S_{dur} + \beta_8 S_{pro} + \epsilon$$

여기서 SATI는 외국인 투자 만족도, REIN은 향후 재투자 의사를 나타내며  $I_{tax}$ 는 조세요인,  $I_{cas}$ 는 현금지원/규제완화요인,  $E_{man}$ 는 경영환경요인,  $E_{liv}$ 는 생활환경요인,  $S_{eff}$ 는 운영효율성요인,  $E_{inf}$ 는 사회인프라요인,  $S_{dur}$ 는 운영지속성요인,  $S_{pro}$ 는 운영전문성요인을 나타낸다.

8개 만족도요인이 투자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이 모델이 유의한가를 나타내는 F 값의 유의도는 0.02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모델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 만족도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운영전문성요인, 경영환경요인, 운영효율성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운영전문성요인으로 나타났다. 운영전문성요인에는 직원들의 영어 및 외국어 구사 능력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성 확보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전 연구 결과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인력의 전문성 부족문제 등을 먼저

지적인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 결과는 투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표 7> 투자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투자 만족도	(상수)		60.913	.000
	조세요인	.116	1.141	0.257
	경영환경요인	.246	2.2434	0.017
	현금지원/규제완화요인	.153	1.497	0.139
	운영효율성요인	.207	2.028	0.046
	사회인프라요인	-.029	-0.288	0.994
	운영지속성요인	.026	0.252	0.801
	운영전문성요인	.290	2.845	0.006
	생활환경요인	.063	0.622	0.536

$R^2 = .231$ , 수정된  $R^2 = .148$ , F유의도 = 0.010

이 모델에서 두 번째로 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영환경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영환경요인에는 근로자 숙련도,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기업 수, 인접 시장 규모,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수준,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용지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변수이다.

경영환경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문항은 각 경제자유구역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요소이므로 투자 만족도는 경제자유구역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지경학적 측면, 주변 상권 및 경제활동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운영효율성요인에는 투자 입주 신청 후 승인까지의 처리 기한, 36개 법률상 인허가 일괄 처리, 정보 획득까지의 소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의 처리 기간, 절차 등의 효율적인 면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을 이 모델에서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가 연구모형에서 가설을 세웠던 인센티브요인이 투자 만족도를 높여 줄 것이라는 가설을 기각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인센티브요인이 완벽하기보다는 이미 오래전에 진출한 기업들이 설문조사에 많이 응했던 결과로서 투자 초반에 받았던 인센티브 요인에 대하여 만족도가 희석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8개 요인의 만족도요인이 향후 재투자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결과가 아래의 표와 같다.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향후 재투자 의사에는 운영전문성요인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결과가 나왔다.

<표 8> 향후 재투자 의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향후 재투자	(상수)		82.648	.000
	조세요인	.088	.855	.395
	경영환경요인	.054	.536	.600
	현금지원/규제완화요인	.052	.508	.613
	운영효율성요인	.164	1.584	.117
	사회인프라요인	-.092	-.893	.375
	운영지속성요인	.121	1.167	.247
	운영전문성요인	.392	3.601	.001
	생활환경요인	.093	.898	.372

참고:  $R^2 = .210$ , 수정된  $R^2 = .125$ , F유의도 = 0.020

향후 재투자 의사에 유의미한 변수가 운영전문성요인의 변수만이 선택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에 계속 남아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풀이될 수 있으나 설문에 응했던 기업들이 모기업의 재투자 의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거나 향후 재투자 의사는 기밀이라고 생각하여 설문에 충실히 대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앞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는 별도로 전체 30개 만족도에 대하여 투자 만족도에 대하여 변수선택 회귀분석을 통해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는 분석도 실시하였다. stepwise 다중회귀분석으로 가장 설명력이 높은 모델을 찾아 그 모델에 포함되는 유의한 변수를 분석할 것이다.

다중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모든 변수들의 상관분석을 먼저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 살펴보면 투자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변수는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감면, 관세 3년간 면제/감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감면, 임대부지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수준, 근로자 숙련도,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전용병원 개

수, 정보 획득까지의 소요 절차,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국가기관의 경제자유구역 지원 의지,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 경제자유구역의 정책 유연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성 확보 정도의 문항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요인의 4문항, 경영-생활환경요인 3문항, 운영 시스템요인 5문항으로 나타났다.

<표 9> 만족도 요인과 각 종속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투자 만족도	향후재투자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감면	0.233(*)	0.200
관세 3년간 면제/감면	.239(*)	0.202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감면	.231(*)	0.200
재산세 면제/감면	0.169	0.085
외국인 근로자 비과세/감면	0.143	-0.037
R&D 및 시설 투자금액 일부 현금 지원	0.120	0.007
임대부지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397(**)	.37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제도	0.101	-0.008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 등 수도권 규제 완화	0.067	-0.001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용지 가격	0.209	0.167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수준	.320(**)	.229(*)
근로자 숙련도	0.286(**)	0.065
인접 시장 규모	0.120	0.045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기업 수	0.142	0.031
월세, 집값 수준	0.066	0.024
생활품 물가 수준	0.037	0.064
거주인구의 영어 능숙도	0.177	0.176
교통·통신 등 기반 인프라 수준	0.112	0.014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전용병원 개수	.253(*)	.233(*)
사회 안정성(치안, 노사관계 등)	0.053	0.030
36개 법률상 인허가 일괄처리	0.198	0.182
투자입주 신청 후 승인까지의 처리 기한	0.175	0.119
정보 획득까지의 소요 절차	.260(*)	0.212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0.225(*)	0.065
국가기관의 경제자유구역 지원 의지	0.228(*)	.244(*)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	0.224(*)	0.173
경제자유구역의 정책 유연성	.343(**)	.287(**)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성 확보 정도	.368(**)	.371(**)
직원들의 영어 및 외국어 구사 능력	0.091	.221(*)
서비스마인드	-0.012	0.133

1) (\*\*)는 0.01 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냄

2) (\*)는 0.05 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냄



반면 향후 재투자 의사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문항은 임대부지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수준,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전용 병원 개수, 국가기관의 경제자유구역 지원 의지, 경제자유구역의 정책 유연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성 확보 정도, 직원들의 영어 및 외국어 구사 능력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요인의 1문항, 경영-생활환경요인 2문항, 운영시스템요인 4문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투자 만족도에 대하여 설문 항목 30개를 모두 변수로 하여 stepwise 방식으로 변수를 선택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 모델이 유의한가를 나타내는 F 값의 유의도는 0.00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모델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R^2$  값은 31.8%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 만족도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네 개의 설문 항목이 들어간 모델이 선택되었다.

투자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대부지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근로자 숙련도'가 선택되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성 확보 정도',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전용병원 개수'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 만족도에 대해 '임대부지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항목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나온 이유를 분석해보면 설문대상의 특성이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 시 제공되는 인센티브 요인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진되었고 공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려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표 10> 투자 만족도에 대한 stepwise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상수)		68.086	0.000
임대부지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0.328	3.538	0.001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성 확보 정도	0.237	2.477	0.015
근로자 숙련도	0.271	2.904	0.005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전용병원 개수	0.222	2.326	0.023

$R^2 = .351$ , 수정된  $R^2 = .318$ , F유의도 = 0.000

또한 '근로자 숙련도'가 두 번째로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투자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 생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분석된다. 경영환경요인 중 '근로자 숙련도'는 경제자유구역의 위치와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유일한 항목이다. 이에 따라 설문 대상이

있던 총 5개 경제자유구역의 거주한 기업들이 비슷한 수준의 판단으로 설문지를 작성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나라의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하여 차이가 많이 나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성 확보 정도'와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전용병원 개수'가 마지막으로 유의미한 영향 변수로 파악되었다. 이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되는 항목들이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변수들이 투자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의 만족도가 투자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의 개방성, 효율성, 적극성 및 일반 국민이 외국인에게 얼마나 긍정적인가라는 4가지 항목을 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델이 유의한가를 나타내는 F값의 유의도는 0.00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모델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 만족도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일반 한국 국민은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긍정적이다'라는 설문 문항이 선택되었다.

즉 한국 국민이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일수록 투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모델에서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국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높게 평가하는 기업일수록 경제자유구역에 오래 남아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표 11> 투자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Constant)		6.669	0.000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제도는 개방적이다	0.023	0.129	0.897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제도는 효율적이다	-0.247	-1.450	0.151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0.044	-0.274	0.785
일반 한국 국민은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0.600	3.840	0.000

$R^2 = .201$ , 수정된  $R^2 = .160$ , F유의도 = 0.001

## V. 정책적 함의

### 1. 실증 분석 결과의 문헌 검증

실증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입주 외국인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부지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근로자 숙련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성 확보’,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전용 병원 개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sup>18)</sup> 이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들 요인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09)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개선해야 할 투자 인프라에 대해 응답 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확대’(20.1%)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 구축’(19.6%), ‘금융 및 자본시장 발전’(16.7%),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12.5%),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인력 확보’(11.0%), ‘FTA 등 대외 개방 확대’(7.9%), ‘도로·항만·통신 등 SOC 확대’(6.9%), ‘국내 정주여건 개선’(5.3%)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2004)의 조사 결과도 이와 유사했다. 외국 투자 기업들은 해외 투자 지역 결정 시 경제적 환경 못지않게 임직원들의 생활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여건’의 중요도가 4.06인데 ‘생활 여건’의 중요도가 4.05로 거의 비슷하며, ‘생활 여건’ 중 의료와 주거의 중요도는 각각 4.10으로 ‘경제적 여건’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물론 실증 분석에서 나타난 ‘임대부지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근로자 숙련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성 확보’,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전용 병원 개수’ 이외에도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고, 이들을 개선하는 것도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입주 기업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실증 분석에 따라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들 4개 요인 개선에 우선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8) 물론 본 실증 분석에서 도출된 외국인 기업들의 정책 수요가 반드시 외국인 투자 결정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만족도 요인들은 외국인 투자 결정에 있어 필요 조건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투자 결정은 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요인과 상황이 맞물려 이루어지는 것이며, 단순히 투자 대상국의 투자 여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2. 주요 개선 과제

### 1) 임대부지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우리나라의 KOTRA에 해당하는 일본의 JETRO(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용지 분양가는 주요 경쟁국의 경제특구에 비해 2~10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인천 송도의 산업용지 분양가는 m<sup>2</sup>당 483달러인데 반해, 싱가포르는 79.54~242.82달러, 홍콩은 244달러, 중국 푸둥지구는 48~50달러에 불과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p17)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분양을 받기 보다는 부지를 임대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투자 금액과 업종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감면해주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투자금 5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임대료가 50% 감면되며,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75% 감면된다. 고도기술의 경우 외국인 기업이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임대료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 이러한 단계별 감면 혜택 부여는 주로 첨단산업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적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임대부지 조성, 토지 임대료의 감면'이 투자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으로 밝혀진 것이나,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기타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감안하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신규 투자 유치를 더 활성화하는 한편 기존 투자의 추가 확대도 도모할 수 있다.

### 2) 근로자 숙련도 제고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근로자 선발 및 관리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일단 영어 사용이 가능한 근로자의 경우 급여 수준이 높고 그 수도 충분하지 않다.<sup>19)</sup> (Braim, 2006:p16) 특히 R&D 분야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영어 구사가 가능한 인력의 급여 수준이 매우 높다. 다수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높아 중간 관리자만 영어 사용이 가능한 인력으로 뽑고 생산직·사무직 직원은 일반 인력을 뽑아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19) Braim IBM 아시아-태평양 부회장은 "우수 인재의 유입과 유출에 있어 한국은 OECD 내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조한 우수 인재 유치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업에게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2008년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기업 6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경영환경 개선사항으로 '원활한 인력 수급'(23.3%)이 '각종 규제와 절차의 완화'(53.3%)와 '행정기관의 서비스 제고'(31.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노무환경 면에서는 '높은 임금 수준'(58.9%)과 '근로자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39.3%)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아직 거주시설과 교육·의료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이 아직 부족한 것도 근로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만족스럽지 않은 급여 수준과 열악한 정주여건은 자연스럽게 높은 근로자 이직률로 이어지고, 이는 업무의 숙련도와 전문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사업 존속 및 영위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질의 우수 인력이 경제자유구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채용 정보를 주변 지역 대학교와 전문대학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 기업의 채용 과정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편의 시설과 문화시설, 병원과 학교 등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해 제 3국의 외국인 근로자들과 연구원들을 대거 채용할 수 있도록 비자 및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 외국의 유능한 인력이 국내에 유입되면 국내 인력과의 경쟁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국내 인력의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이미 싱가포르를 외국인 인재 유치의 주요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 3)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성 확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파견 공무원의 경우 파견 기간이 최장 3년 밖에 되지 않아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p10) 이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난 상황에서 최대 3년의 임기라는 것은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최소 3번,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바뀌었다는 의미이다. 새로 부임해 업무를 파악하기까지 보통 최소 3~6개월 정도 걸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잦은 교체는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각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투자 유치 및 기업 애로 해소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낮은 연봉 수준과 계약 기간 제한 등의 사유로 이직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인천 경제

자유구역청의 경우 2003년 개청 이후 2008년 말까지 115명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했으나 2008년까지 70명이 이직해 60.9%의 높은 이직률을 보였다. 이직자 중 6명만이 계약이 끝났고, 나머지는 의원면직(50명) 및 상향 지원(12명), 질병 등의 기타(2명)로 집계됐다. 일부 이직자는 연봉이 높은 대학 연구소나 타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세계일보, 2009.2.10) 계약직 공무원들의 계약 기간과 보상 수준을 개선해 우수한 인력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권한 위임도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환경영향 평가, 건축 심의 등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등 실질적인 일괄 행정 처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sup>20)</sup>(전국경제인연합회, 2009:pp30~31) 아울러 현재 관리·감독 업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을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들을 위한 부지 개발, 기업 유치, 기업 활동 등의 업무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외국인 전문가의 채용과 보상을 손쉽게 하는 등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지역은 개발 정책, 예산, 교육, 행정, 치안 등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자치권을 가지게 되며,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위상 또한 강화돼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내 의사결정기관인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과제와 개발 및 외자 유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

#### 4)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전용 병원 개수 확대

현재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인 학교는 대구의 국제학교(2010년 8월 개교), 인천 송도의 채드윅(Chadwick) 국제학교(2010년 9월 개교)의 2곳에 불과하다. 2011년 9월에 인천 청라에 달튼(Dalton) 외국인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이외 3~4곳이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이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단계에 있다. 이들 학교가 실제로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학교는 모두 합쳐 6~7곳에 불과한 셈이다.

20) 대한상공회의소(2007)에 따르면 외국인 기업의 신청에서 실제 인허가까지 6개월 이내에 처리되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 부처 협의에만 80일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일반적으로 8~9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다 많은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 잉여금 해외 송금이 금지되어 있고, 비영리 기관만이 학교 설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규제 때문이다. 실제로 영종지구 외국인 학교의 경우 인천시와 영국의 모 학교 재단이 부지와 건물 지원, 투자요건, 잉여금의 해외 송금 등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다 지난 2007년 무산된 바 있다.

적게는 700억원에서 많게는 1,500억원에 이르는 국제학교 초기 투자 비용과 까다로운 행정 절차도 외국 교육기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채드워 국제학교의 경우에도 2009년 상반기에 모든 시설이 완공되었지만 외국 교육기관 유치와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늦어져 실제 개교는 2010년에서야 이루어졌다. 국제학교 설립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착과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 설립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06년 용산 외국인 학교 건립 시 정부가 약 130억원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외국 병원 설립도 시급한 과제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2004)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sup>21)</sup>,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내 주한 외국 기업인들은 질병 치료를 위해 모국의 병원이나 해외에 있는 국제병원 등 한국 병원 이외의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30%를 차지했다. 한국의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하는 주요 이유로는 '의사소통 문제'가 67%로 가장 비중이 컸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22%를 차지해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비용'이나 '보험' 문제에 대한 응답은 낮았다. 즉 가벼운 질환의 경우에는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만 중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모국 또는 해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핵심은 '의사소통'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국내 병원에서 외국인 의사를 고용하거나 외국인 병원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법은 외국에서 취득한 의사 면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국내에서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의사와 간호사, 행정 인력을 구하는 것도 현실적인 여건 상 쉽지 않다. 이에 따라 2003년 7월 제정된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외국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설립 절차 관련 법이 미비해 실질적인 진척이 없었다.<sup>22)</sup>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국내 의료 체계에 미칠 영향 때문에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sup>23)</sup>(전채희, 2010:pp7~8)

21) 2004년에 조사된 내용이 2011년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이 얼마나 부진했는지를 반증해준다.

22) 현재 인천시가 서울대병원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과 공동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600병상 규모의 첨단 병원과 생명의학연구센터를 2013년까지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연세대학교도 세브란스국제병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외국병원 특성상 현재 의료법 등 각종 규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

경제자유구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 병원 유치와 관련 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경제자유구역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차제에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의료서비스시장을 대폭 개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내 병원들도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VI. 결 론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우리 경제 구조를 선진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불합리한 행정 절차, 과도한 규제, 정주여건의 미비 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을 비롯한 6곳에 경제자유구역을 도입하게 된다.

이후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많은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었으며, 획기적인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도 제공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투자로 이어진 경우도 일부 있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병원과 학교 등 일부 핵심적인 규제가 개선되지 못했고, 정주여건 개선 등이 기대한 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한데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놓고 정치적인 논란이 야기되면서 정책의 추진 속도가 느려지고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 분석 결과도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국가경제와 기업 경영 관련 문제가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인 고려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개입될 때 경제자유구역은 그 기대 목적을 충족할 수 없고 막대한 재원과 노력, 시간이 투입된 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국내외 기업을 구분 짓는 큰 차이는 없다. 일부 문화적인

---

다.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 병원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문제도 산업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또한 해외 병원 유치와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으로 인해 경제적 격차가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다. 돈이 많은 사람은 외국 병원을, 돈 없는 사람은 국내 병원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소, 위험 관리 부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업은 시장이 존재하고, 규제가 적고,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곳이라면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모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경제자유구역이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크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이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 건설과 마찬가지로 20~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3년에 인천, 부산·진해, 광양이 처음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에 황해, 새만금, 대구·경북 지역이 추가적으로 지정되어 길게는 7년, 짧게는 2년 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아직 기반 조성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아직 규제 완화나 투자 인센티브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심지연, 2010:p4)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 부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에 주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이해 당사자들도 이해관계를 떠나 정부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쟁력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제3차 회의 보고자료.
- \_\_\_\_\_. (2009). 「외국인 투자 유치 제도 강화」. 제13차 회의 보고자료.
- 김기환. (2006). 「Free Economic Zones in Korea」.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
- 김승원. (2007). 「외국자본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은행.
- 김신, 정창화, 유종선. (2010).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 김영태 & 김영민. (2007). 「외국인 직접투자의 변동요인 분석」. 연구보고서, 한국은행.
- 남광희 & 윤성훈. (2005). 「우리나라 FDI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 남덕우 외. (2002). 「경제특구 : 한국경제 생존 프로젝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대한상공회의소. (2006). 「우리나라 FDI 유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 \_\_\_\_\_. (2007).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 \_\_\_\_\_. (2009). 「주한 외국 기업이 바라본 국내의 투자환경 조사」. 조사보고서.
-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 모니터 그룹. (2010). 「미래의 성장기지 경제자유구역」. 서울: 동아일보사.
- 류상영. (2009).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 - 역사적 개관과 발상의 전환」. 세미나 발표자료, 안민정책포럼.
- 박봉규. (2003).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이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재곤. (2008). 「자유무역지역 정책의 추진 방향」. 산업경제분석, 산업연구원.
- 박재룡. (2002).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 방안」. CEO Information 364호, 삼성경제연구소.
- 박추환. (2006).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 평가와 개선 방안」. 사업평가 현안분석 15호, 국회예산정책처.
- 배철호. (2006). 「경제자유구역사업 평가 -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2006년도 국가주요 정책·사업평가 보고서 제 16호, 국회 예산정책처.
- 심지연. (2010). 「경제자유구역 관련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 104호, 국회 입법조사처.
- 양금승. (2009). 「FEZ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경제연구원.
- \_\_\_\_\_. (2010).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와 보완과제」. 월간 전경련 2010년 8월호, 전국경제인연합회.
- 유병규 & 김동열. (2010). 「외국인 투자 부진과 활성화 과제」. 경제주평 418호, 현대경제연구원.
- 이병기. (2008).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과 제도 개선 과제」. 정책연구, 한국경제연구원.

- 이상동. (2010). 『산업정책의 전환 모색: 경제자유구역(FEZ) 비판』. 연구보고서, 새로운사회를 여는연구원.
- 이성봉. (2006).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운영 방안』. 국토 301호, 국토연구원.
- 이수행. (2009).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CEO Report, 경기개발연구원.
- 이외희, 이성룡, 이수행. (2009). 『국가전략 복합특구의 필요성 및 조성 방향』. Policy Brief No.23, 경기개발연구원.
- 이홍식. (2008).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서울경제 2008년 3월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장운종. (2008). 『외환위기 10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의 특징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산업연구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한 외국 기업인 인식 조사 결과』. 조사보고서. \_\_\_\_\_ (2008). 『주한 외국 기업인이 본 우리나라 경제 환경 전망』. CEO Memo. \_\_\_\_\_ (2009).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제도의 보완과제』. 규제 개혁 시리즈3.
- 전재희. (2010).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한경 밀레니엄 포럼 발표자료.
- 정세은 & 김봉한. (2009).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투자, 고용 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제15권 제2호.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 정종인 & 박장호. (2007).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 및 과제』. 연구보고서, 한국은행.
- 정형곤. (2007). 『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 평가 및 추가 지정의 타당성 연구』. 세미나 발표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형곤 & 나승권. (2008a).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신정부의 정책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8 No.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8b).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11).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11 No.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선일보. (2008). 『선진경제로 가는 돌파구 인천경제자유구역』. 서울: 조선일보사.
- 조현숙 & 장현미. (2010).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은행 전북본부.
- 지식경제부. (2009). 『경제자유구역 백서 2003~2008』. 서울: 지식경제부
- 황상연 & 조성중. (2008).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과 실천 과제』. CEO Report, 경기개발연구원.

- Bloom & Williamson. (1997). *Demographic Change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Asian Development Bank, *Emerging Asia*. Manila.
- Boehmer. (2009). *Stocktaking of Good Practices for Free Economic Zone Development*. Working Group on Investment Climate Policy and Promotion, OECD Eurasia Competitiveness Programme.
- Braim. (2006). *Korea as a Northeast Asia Business Hub*. 세미나 발표자료, 안민정책포럼.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0).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 A Sector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 Krugman. (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Nov/Dec vol.73 Iss.6 pp62~79.
- World Bank. (2009). *Special Economic Zones - Performances, Lessons learned, and Implications for Zone Development*.